

「분단체제, 민족의 배신과 민주주의의 억압」에 대한 토론문

임지훈(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박솔지 발표자의 『분단체제, 민족의 배신과 민주주의의 억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분단체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제시해준다. 이는 현 시국에서 표출되는 ‘태극기집회’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가 “분단국가주의를 스스로 내면화함으로써 국가 장치와 의회의 무능에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촛불’을 비판”으로 일명 ‘태극기부대’를 해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발표자는 ‘민족’의 발전사를 논하면서 현대 민주공화제의 주체를 국가가 차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과거 유신체제가 ‘민족’의 상징과 ‘국가’의 상징을 독점하고 철저히 국민을 배제시킨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델로 발표자가 상정한 ‘자기통제’ 수준의 직접민주주의로 성숙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분단상황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 시국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묻어 나온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글에 많은 공감을 갖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쉬움도 남는다. 우선 좀 더 분단문제에 왜곡된 ‘민족’논의에 집중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4장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논의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전 세계적인 대의제의 위기를 언급한 것은 논점을 흐리게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별도의 설명 없이 병렬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민족’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발표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대의제 위기현상을 ‘민족’문제와 연관해서 긴밀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제외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문제를 다루면서 남한의 사례에만 편중된 문제이다.

분단문제에 있어 포괄적으로는 한반도와 디아스포라가 그 대상이 되겠으나, 협의적으로는 최소한 남북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족’에 대한 ‘국가’로의 독점현상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실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대척점에 있는 쌍둥이 같은 존재다. 백낙청이 지적한 대로 ‘적대적 공생관계’란 표현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주체사상이 가능했던 것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이력이 신격화되면서 가능했다. 그것을 곧 ‘민족의 아버지’이자 ‘태양’으로 승격시켰다. 이러한 민족적 자금을 북한당국은 전 인민이 아닌 ‘수령’과 그 후계자에게만 집중시켰다. 당연히 대외적으로는 배타성을 더욱 배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위 ‘떡밥’을 남한의 반공보수층 일부에선 ‘민족=빨갱이’로 몰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단체제의 문제와 해결에 있어서 남한 못지 않게 북한의 문제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의 문제는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발표자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분단체제의 해체를 긴밀하게 결합하자는 마지막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현 시국도 그 기원은 40년동안 이어진 유신의 그림자이다. 분단은 끊임없이 주체를 '국민'(또는 민중)에서 '국가'중심으로 환원시키는 반 민주적인 구조이다. 따라서 분단문제를 두고 민주주의의 발전만을 논한다면 언젠가 그 '유리장벽'에 막혀 또 다른 좌절을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동시에 발표자의 결론에 첨언하자면 북한에서도 어떻게 민주적인 환경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했으면 한다. 현 북한정부는 인민의 대표자로서 한국정부로는 일종의 '국가 대 국가'로서 협상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로 인정되어서도 곤란하다. 최근 김정남의 독살에서도 보듯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삼대 세습은 인민의 권리 보단 통치자의 위신에 국가권력이 낭비되는 현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분단문제의 해소에 있어 남한의 민주주의 성숙 못지 않게 북한의 인민이 민주적인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더욱 다변화된 연구실천이 필요하다.